여야 금투세 폐지 충돌…"투자자 감세" vs "총선용 정책"

국회 기재부 현안보고…"여야 합의 시행 1년 앞 즉흥 결정"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 철저한 대응 한 목소리 주문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현안보고에서 여야는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총선 표심을 의식해 국회와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표(票)퓰리즘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반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맞섰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5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여야가 유예 기간을 합의해 시행이 1년도 안 남았는데 불현듯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이라며 "이 정부에서 일관된 건 고소득자에 대해 세액을 감소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 "시행도 안 했는데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의 원인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금투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 아닌가.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라고 따졌다.

고용진 의원도 "아무리 선거철에 대통령실의 요구가 있다고 해도 기본은 지켜줘야 하지 않나"며 "시행도 안 한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니 국제적 웃음거리"라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한 번 정해진 경제정책이 1년, 10년, 100년 변함 없이 간다고 생각하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건 많은 사례가 있다"며 금투세 폐지 추진은 정책 유연성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자가 10배 이상 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과세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정부는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금투세와 관련해 당시 한 5만명이 국회 청원을 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일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계 인사로부터 '금투세 도입이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비판에 대해 "금투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1천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당장 올해 영향을 주는 건 크지 않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태영건설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와 관련,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말지 임박한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PF 시장에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으며 "가볍게 생각하다가 크게 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써서 전체 과정을 관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PF 문제가 터지면 유동성 공급과 채권단을 압박해 상환 기간을 미뤄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왔고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부총리가 3천500개 PF 사업장에 대해 잘 점검하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 피상적이고 낙관적 생각 아닌가 생각한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살릴 곳은 살리고 정리할 곳은 정리하는 것을 본격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당 탈당 이상민 의원 국힘 입당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새로 입당한 이상민 의원에게 환영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지지율 35.7%…2030세대서 큰 폭 하락

리얼미터…쌍특검 거부권 영향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일(1월 1주차) 전국 18세 이상 2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1.5%포인트(p) 내린 35.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2%p 상승한 60.8%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12월 2·3주차 조사서 2주 연속 36.3%를 기록한 뒤 지난 주 37.2%로 반등했으나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했다.

리얼미터 측은 "본회의 표결 8일 만에 이뤄진 '쌍특검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논란이 긍정층 이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공정성에 민감한 20·30대의 긍정 여론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6.7%p↓), 광주·전라(2.4%p↓), 대구·경북(1.7%p↓)에서 내렸고, 연령별로는 20대(5.4%p↓)와 30대(5.2%p↓), 40대(3.0%p↓)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대전·세종·충청(8.1%p↑)에서는 국정 수행 지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1.7%p↑), 70대 이상(1.9%p↑), 60대(1.2%p↑), 50대(1.1%p↑)에서도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3%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우주항공청, 과기부 소속으로…항우연·천문연 소속기관 편입

설치 법안 국회 과방위 통과

한국판 '나사'(NASA·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8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우주항공청 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은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여야는 막판까지 우주항공청의 '직접 R&D' 기능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이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연구를 우주항공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항우연과 업무 중복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하게 됐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됐다고 여야는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여당은 항우연 이전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수용해 해당 조항을 법제화하는 데 동의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항우연과 천문연이 있는 대전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서 두 기관 기능 축소 및 이전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가 컸다는 분석이 있다.

이밖에 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도 담았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해 4월 이후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로 9개월간 상임위에 계류됐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과방위 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구성하고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합뉴스

이준석 신당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 시행"

첫 정책 발표…"KBS 수신료 폐지"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은 8일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KBS 수신료 폐지 및 조세 지원 등을 신당의 첫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면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KBS와 EBS 재원과 관련,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조세 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KBS의 사회적 책무, 상업성이 낮은 콘텐츠 제작 및 보급 등을 이유로 들어 "공영방송사는 역할이 지켜져야 한다. 적극적인 조세 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BS가 조세 지원을 받게 되면 보도 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 진행자들을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광산구
광산구민상 수상
첨단우리병원은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화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정형외과 중점 병원
든든한 척추 /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 공원 앞 위치!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